

# ‘전기차 포비아’ 전방위 확산...공포 줄일 대책 시급

광주시, 지하충전 시설 일시 폐쇄 남구서 오인신고 소방 출동 소동 선박 선적 기준 충전을 50% 미만 정부, 지원·방안 대책 내달 발표

지난 1일 인천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800대가 넘는 차량이 전소되거나 그 을리는 대형 화재 사고가 일어난 뒤 ‘전기차 포비아’가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일엔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한 차량에서 난 매연을 전기차 화재로 오인한 시민의 신고로 소방 당국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하는 등 전기차 화재 공포가 사회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21일 광주소방본부와 전남소방본부의 ‘전기차 화재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는 △2021년 2건 △2022년 2건 △2023년 0건 △2024년 2건으로 나타났고 전남도는 △2021년 3건 △2022년 2건 △2023년 1건 △2024년 2건이었다.

전국 기준으로는 2019년까지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전기차 화재 발생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 △2024년 상반기(1-6월) 29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전기차 화재 발생 증가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전기차는 불이 나면 순간적으로 리튬이 터지면서 1000도 이상의 폭발을 일으켜 화재 진압이 어렵다’는 인식이 퍼져 시민들의 공포와 경각심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로 보인다.

이에 광주시와 각 지자체는 전기차 포비아를 줄이기 위해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는 청사 지하의 5개 충전시설 사용을 중단하고 전기차 주차를 전면 금지했다.

광주 남구는 청사 지하 주차장에 있던 9개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 1층 주차장으로 옮겼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두려움은 전기차 선박 선적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남에서는 해양수산부의 권고에 따라 ‘목포·여수·진도·완도·녹동→제주’ 항로의 선박들이 전기차 선적에 대해 충전을 50% 미만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상에서 불이 나면 진압이 어려운 점과 많은 승객을 태워 운항하는 여객선 특성상 대형사고 우려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규제들이 전기차 소유주의 생활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명확한 기준과 법 제정을 통해 전기차 소유주의 권리 보장과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도 해운항만과 관계자는 “다음 달 해수부에서 전기차 선적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새로 발표할 예정이다”며 “현재까지 전기차 전용 화재 진압 장비를 갖춘 선박은 없는데 내년 중으로 선박 내 전기차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장비 보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근중 광주시 사회재난과장은 “9월 초

에 환경부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면 그것과 연계해 광주시도 전기차 화재 대비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아직 정부의 구체적 지침이 나오지 않아 선부른 정책이 오히려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울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 중이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서울시는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입차를 위해선 90% 이상의 충전율이 필요하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전기차 화재가 충전율과 큰 연관이 없다고 반박하며 서울시의 이러한 대책이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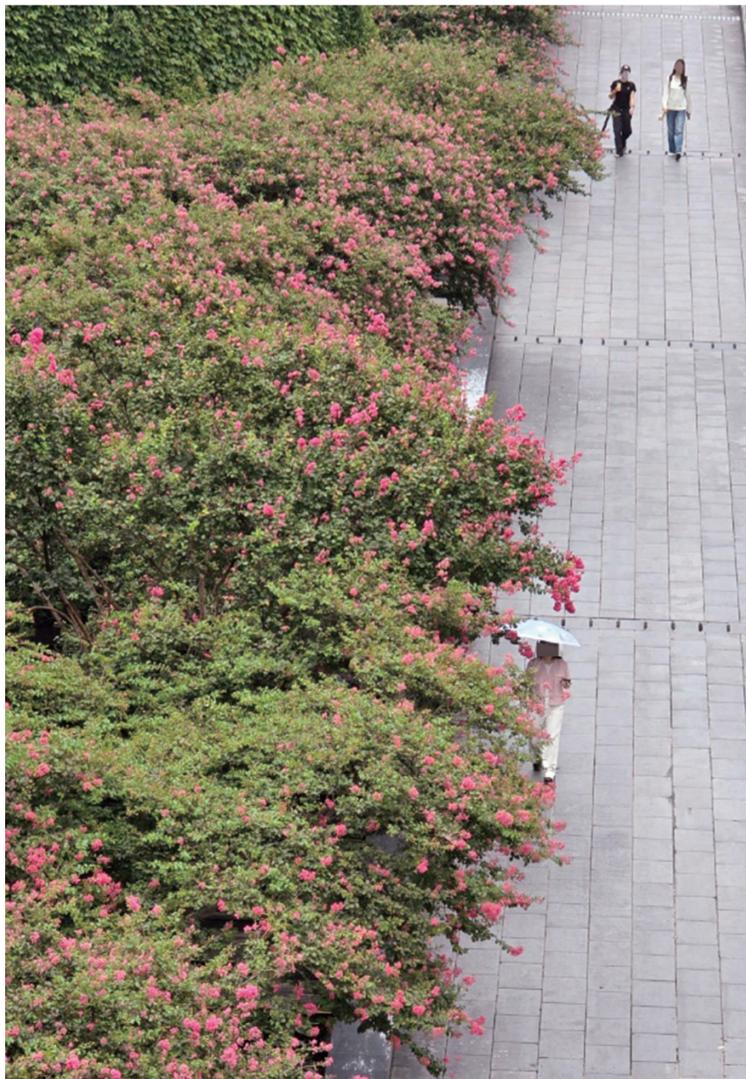
전문가들은 전기차 포비아 확산을 막기 위해선 정부가 나서 배터리 안전규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임춘택 광주과학기술원(GIST) 에너지융합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 보급된 전기차 배터리는 수백 개의 셀 중 단 하나만 불이 붙어도 전체로 확산하는 구조다. 냉각재나 난연재를 써 화재 전이를 차단하거나 고장 난 셀이 없는지 진단하고 관리하는 배터리관리기술(BMS)이 이미 존재하고 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소화하는 기술도 있지만, 해당 기술을 적용하면 가격이 올라 제조사들이 선택하기 꺼린다는 것이다.

전기차 제조사들이 이를 채택하기 위해선 결국 정부의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초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정책 마련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충전을 규제와 함께 사후 화재 진압 등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배롱나무 꽃길 처서를 하루 앞둔 21일 비를 동반한 태풍 ‘종다리’가 물러나고 다시 더위가 시작됐다. 시민들이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 인근에 활짝 핀 배롱나무 꽃을 보며 가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다. 김양배 기자

## 광주선관위, ‘선거비용 초과’ 박군택 의원 회계책임자 고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에서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박군택 의원의 회계책임자를 고발했다.

광주시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박군택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회계책임자 A씨는 선거비용제한액 1억9000만원 대비 2880만원 정도를 초과해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상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회계사무보조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의 고발은 ‘선거비용’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을 ‘일반 비용’으로 생각한 것 같다”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 김문수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여론조사 왜곡 발표 혐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발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순천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 4월10일 치러진 총선 과정에서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해석한 게시물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지에 올린 혐의 등을 받는다.

이밖에도 선거 전후 정치자금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등 각종 고소·고발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지 기자

## 안전한 캠핑을 위해 우리 모두 실천해요



### 캠핑 시, 가스안전 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받침대보다 큰 불판은 매우 위험해요



부탄캔은 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하세요



부탄캔을 온수 등으로 가열하면 파열됩니다



가스용품은 꼭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사용하세요

